**국방협력에서 바라본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 및 대응(PCVE)과 한국**

장지향(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중동센터장)

**한국의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 및 대응(PCVE) 정책의 실제와 도전**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 및 대응(PCVE)을 위한 국제협력을 위해 개별 국가가 경험하고 발전시켜온 구체적인 대테러 전략을 공유하는 것은 중요하다. 한국 PCVE 정책의 발전 배경과 과정을 짚어보는 것 역시 정보 공유와 대응 체계 구축을 포함한 지역〮국제 국방협력을 구체화하는 데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다. 동질성을 강조하는 한국 사회의 특성으로 인해 급진 이슬람과 관련된 국내의 폭력적 극단주의와 테러리즘 문제는 아직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한국에 사는 외국인은 200여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4% 정도를 차지하며 다수는 동남아 출신 제조업 공장이나 노동 근로자들이다. 국내 무슬림 인구는 대략 15만명이다. 정부가 추적해온 외국인의 극단주의 관련 활동에 따르면 2011년 이래 60여명이 극단주의 단체와 연관되어 추방했고 특히 ISIS와 알 누스라 전선에 동조해온 5명을 체포, 조사하기도 했다. 국내에서 근로자로 일했던 7명이 출국 후 2015년 ISIS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같은 해 한국 청소년이 터키를 통해 시리아로 들어가 ISIS에 가담하기도 했다.

한국의 PCVE 정책은 국내 극단주의 추종 세력의 규모보다는 한국의 경제, 문화, 사회 활동이 해외 무대와 긴밀히 연결되어있다는 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한국은 수출지향정책과 시장 개방, 자유 무역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뤘고 여전히 많은 수의 한국인이 해외를 오가며 사업을 하고 공부를 하며 여행을 다닌다. 우리 에너지 자원의 80%와 해외 수주의 60% 이상이 중동에 의존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인이 종종 중동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에 희생되기도 한다. ISIS는 2015년 공식 홍보 책자에서 한국을 62개 ‘십자군 동맹국’에 포함시켜 적국 리스트에 올렸다. 군사적 지원이 아닌 인도적 지원에 그쳤지만 우리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반 ISIS 국제연합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청소년 급진화 예방 차원에서 인터넷을 통한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 관련 커리큘럼을 개발했다. 최근 젊은 세대의 급진화 현상은 이슬람에 대한 오해로 인해 더욱 확산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보다 건강한 다문화 정책의 정착을 위해 동화가 아닌 공존을 통한 통합을 강조해오고 있다. 2016년엔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이 통과됐고 이어 국무총리실 산하에 대테러센터가 설치됐다. 테러방지법은 원래 북한의 사이버 테러를 비롯한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법으로 국정원에게 지나친 권력을 부여했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로써 국방부, 외교부, 국정원, 국무총리실이 폭력적 극단주의를 다루게 되었고 부처 간에 PCVE 관련 용어와 대상, 정책 실무를 두고 갈등이 일기도 했다. 특히 국방부의 영역과 관련해 폭력적 극단주의의 예방을 위해선 군사력 같은 하드파워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국방협력의 역할을 미미하게 보는 견해가 있었다. 하지만 ISIS 격퇴의 경험에서 보듯이, 테러조직에 대한 군사적 응징과 철저한 패퇴만큼 폭력적 극단주의 확산의 예방과 대응 관련 심리전에서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 또한 현재의 군은 세계적으로 대테러전부터 국제평화유지와 재건사업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걸쳐 활동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소프트 파워 역시 빠르게 개발하고 있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리더로서 국제규범과 인도주의를 강조하는 중견국 정책을 추구해왔다. 하지만 최근 해외 거주 한국인의 인질 가능성이나 테러의 위협이 높아지면서 신중 외교라는 미명아래 ‘테러리스트 자극하지 않기’ 전략을 취해야 한다는 견해가 부상하고 있다. 물론 자국민 보호는 우리 정부의 최고 목표 중 하나이다. 하지만 소극적인 외교 행보와 자국민 보호 사이에는 실증적이고 뚜렷한 인과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테러단체가 원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이목을 받는 것이고 민주주의 국가는 이러한 공격에 단기적으로 취약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우리에겐 한반도 의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합의와 윤리적 지지가 상시적으로 중요하다. 이에 대한 사전 작업으로서 우리의 국제사회 기여도를 높여 도덕적 권위를 확보해야 하며 중견국 정책은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 및 대응(PCVE)의 전망: 테러리즘의 뉴 노멀과 중동의 비자유주의 질서 부상**

작년 하반기 ISIS가 시리아 락까와 이라크 모술을 뺏기면서 결국 격퇴됐다. 사실 ISIS는 조직 내 위계질서의 약화와 탈중앙화 현상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다. ISIS 조직원은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 자발적으로 극단주의에 입문했다. 가상 공간에서 집단적 극단화 과정을 통해 충원된 ISIS 하부 조직은 인터넷 평등주의를 내세우며 독단적으로 행동했고 핵심 지도부의 권위를 부정했다. 그러나 조직의 역량이 ‘ISIS 브랜드의 프랜차이즈화’ 현상으로 과대포장 됐다. 주변 국가에서 이전부터 존재하던 군소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가 브랜드를 차용하거나 서구의 소외된 무슬림 이민자 그룹 출신이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후 ISIS와의 연계성을 내세운 양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개방성과 인권을 중시하는 민주주의는 테러에 원천적으로 취약하다. 폭력적 극단주의의 시대가 도래한 이상 민주사회는 테러 격퇴를 위해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뉴 노멀로 등장했다. 테러리스트는 각 나라의 구조적 취약 고리를 상시적으로 공격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역과 지구 차원의 국방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한국의 경우도 ‘헬조선’이란 용어가 사회 불평등, 극단적 경쟁, 높은 자살율에 대한 젊은 세대의 절망을 보여주듯 소외 계층의 불만이 이슬람이란 매개체 없이도 극단 성향 채팅방의 에코 체임버 효과를 통해 어느 순간 폭발할 수 있다.

ISIS 격퇴 이후 중동에서는 이란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비자유주의 질서가 자리잡아가고 있다. ISIS 격퇴전은 참여국 간의 이견과 정책 우선 순위의 차이로 한동안 교착상태에 빠졌으나 결국 2017년 승리했다. 하지만 ISIS가 격퇴되면서 아사드 정권은 정부군-반군-ISIS 간의 시리아 내전 구도에서 승자로 거듭나고 있다. 세습 독재 정권을 적극 도운 이란과 러시아도 승전국이 됐고 전후 역내 질서를 재편하고 있다. 러시아는 시리아 내 장악력을 공고화했고 이란은 시리아는 물론 이라크, 레바논, 예멘으로까지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승전국이자 전후 협상 주도국인 이란, 러시아와 달리 미국의 입지는 급격히 좁아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가 시작했던 시리아 반군 지원을 중단했고 보복을 두려워한 반군은 대거 이탈해 정부군으로 흡수됐다. 중동 전역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는 추락하고 있으며 이는 자유주의 동맹과 서방 협력 블록의 균열로 이어지고 있다.

이란과 러시아가 비자유주의 중동 질서를 확산시킴에 따라 친 아사드 성향으로 급선회한 터키가 새 질서에 적극 합류하고 있으며 카타르 역시 걸프 산유 왕정이 집단적으로 보여 온 전통적인 대외 행보를 거부하며 새로운 기회를 엿보고 있다. 한편 ISIS 격퇴전에서 미국과 서방을 적극 도왔던 쿠르드자치정부는 이라크, 이란, 터키의 압박과 미국의 외면으로 또다시 독립의 기회를 놓쳤다. 이처럼 중동에서 부상하는 비자유주의 역내 질서는 테러리즘의 뉴 노멀 시대 불가측성을 더욱 높이면서 현재의 불안한 균형을 빠르게 위협하고 있다.